



재협상 못한다” 밝힌 뒤 물밑 대화를

은 진짜 더 끔찍하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대표적인 매과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을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간주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 중 하나다. 아마도 북한이 성공관에서 대기관으로 진입할 때 엄청난 고열을 극복할 수 있는 탄두를 제작해 전면 배치하기 전에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정밀타격을 가해 핵시설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도저히 이행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늘날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문제는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과 이를 반영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해 미국 내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더 이상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정권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다른 전 국무부 장관 출신들은 한국이 자국의 목소리를 내서 미국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입장에서 서서 대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을 관리하고 문제 해결방안과 전략을 수립해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전략이 없어 보이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대북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면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따라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이탈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한국이 수용한다면 트럼프는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신뢰할 수 없다.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핵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가 필요한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평화협정을 협상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북한이 우라늄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는가. 크리스 힐 차관보가 보아줬듯이 워싱턴에선 북한 입장을 대변하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많은 국무부 관료가 인식하고 있다. 평화협정에는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미국외교협회에서 샘 넌 전 하원 의원과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이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평양으로 가는 길은 중국을 통해서’이다. 중국에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이 불안정하면 난민 문제 등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파악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들을 달러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물자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상(鴻祥)그룹을 미국은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고 자산 몰수를 검토 중이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통치 스타일이 변화했다고 보나.

“중국의 정책이 변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매우 불편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미국은 MD 체계와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의 우방국들과 안보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중국의 대북 정책이 변했다는 것은 레토릭이나 시 주석의 통치 스타일 때문인지 근본적인 정책은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핵을 소유한 북한도 원하지 않지만 동북 3성과 국경을 맞댄 북한의 불안정은 더욱 원하지 않는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미국이 외교 정상화, 평화 체제, 제재 중단과 같

트럼프 외교안보 우선순위는

패권국 떠오른 중국과 관계 재설정
북핵 카드로 중국 더 압박할 수도

트럼프 전형적인 반기득권 협상가
기존 방식으로 움직이면 백전백패
북한에 군사적 조치도 배제 못해

은 수단으로 북한 체제 보장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5차 핵실험 후에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한 입장은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과 중국은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한반도 문제를 양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즉 영구적인 분단 한반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커다란 도전이 존재한다.)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과 관련, 피벗(pivot)이라는 단어를 조사해 봤더니 미국무부는 이 표현을 1904년 처음 사용했다. 당시 국무장관은 엘리휴 루트(Elihu Root)

였다. 그 당시 이 단어의 뜻은 러시아의 남진과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는 정책이었다. 아시아로의 회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란 것을 중국 지도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 자기네 체제가 미국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무슨 이유로 미국과 대북 문제와 관련해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 정권 붕괴에 목표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왜 자국의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정책에 순순히 협조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회귀(Pivot)라는 표현 대신 ‘재균형(Rebalance)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장벽이 될 것임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그 외에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달러 시스템에서 제외시키면 정상적인 상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다.”(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 중국 관련 자문에 응해온 브루킹스연구소의 찰리 박사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전략을 숙지하고 있는 시 주석은 절대로 미국과 북한이라는 2개의 전선을 만들어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찰리 박사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영토 분쟁,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유사시 대책을 협의한다는 것은 시 주석에게는 자살행위라고 지적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미국 요청대로 중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북한의 석탄·철광석·금 및 기타 자원의 수입을 차단하며 10만톤의 원유 무상 공급을 철회하기로 결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북한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낮고 이미 제재로 인한 높은 수준의 고통도 감내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중국이 북한에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인다고 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중국이 북한 국경 1400km를 완전히 폐쇄하면 북한 경제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더 강화하고 북한의 외화 획득 창구인 노동자들의 외국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냉소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미국에 북핵 문제는 꽃놀이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제 공조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중국도 대북 문제에 강경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한 MD 체계, 한·미·일 군사동맹 구조를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한국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밀착되지 않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며 한국과 일본에 고부가가치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중국을 견제하기에 매우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 협조하고 싶어도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때문에 북한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미국은 위에서 언급한 6가지 계기를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북핵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이런 부수적 측면들이 드러난 것이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에는 도전인 동시에 기회다. 트럼프에게는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뤄 동북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아마도 주둔비용 증대뿐 아니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권 반환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을 우리가 넘겨받겠다고 해서 동맹국인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자주 국방을 할 수 없고 자기 군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국가가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우리 정부가 전작권을 미국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또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 유사시에 자위대 진출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저지할 수 있을까.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의 논리를 무용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 관계의 호전이다. 6·15 및 10·4 합의문을 이행해야 하고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시켜야 한다.

새로운 미 행정부에 “당신들의 대북 정책은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기 이전에 “우리의 대북 정책은 이런 것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전의 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트럼프가 미 대선을 승리로 이끈 전략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트럼프의 목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 불확실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사고의 틀에 머문다면 위기이고 역발상의 틀을 이용할 수 있다면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11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반(反)트럼프 집회에서 항의 중인 시민들.

[AP=뉴시스]